



5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미래비전 선포식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음 9월 24일) 제385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번 2길 6번지

중앙·지방정부, 재정분권·균형발전 방안 모색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으로 처음 주재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17개 시·도지사,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 장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중앙과 지방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향 △국고 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력 강화방안 등 3건의 보고안건과 △국가-지방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방안 1건의 의결안이 상정됐다.

첫 번째 안건인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은 회의의 명칭을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변경해 국가 차원의 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논의하는 최상위 협의체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회의 기능에 '다른 법률에서 해당 회의의 심의를 거처도록 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도록 해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정책을 설계·결정하는 협치 구조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김관영 도지사 “지특회계 본래 취지 살려 지역 특화 자립발전 추진해야 국민주권정부 들어 첫 회의 열려 큰 의미… 재정분권 확대 정부 입장 환영”

를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분권을 둘러싼 토론에서는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소비세율 조정 등 핵심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김관영 지사는 과거 진보 정부 시절 재정분권 성과를 상기시키며 현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그는 “진보진영 집권 시기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분권 측면의 비약적인 도약이 있었다”며 “국민

주권정부 역시 19년간 동결된 지방교부세율 인상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지역 주도 국가성장 기반 구축의 핵심 동력인 지방의 자주재정권 확대를 위해 대통령께서 적극 나서주시길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지방소비세율 상향 조정에 대해 김 지사는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오랜 기간 산업기반이 취약해 낙후·소외된 지역은 지방소

비세율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 간 재정 격차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 원칙에 더해서 인구감소를, 지역 낙후도, GRDP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배분원칙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의 포괄보조 확대 방안에 대해

서도 의견을 밝혔다.

지특회계 재원 확대는 환영할 일이지만, 노인일자리 지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등 인건비성·전국단위 사업이 포함되어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특회계 본래 취지를 살려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오늘 국민주권정부 들어서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돼 대단히 큰 의미가 있었다”며 “특히 재정분권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시장 상황·변화 따라 규제지역 확대 가능”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권을 비롯한 10·15 부동산대책 이후 비규제지역으로 차츰 종선회가 번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 상황과 변화에 따라 규제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11일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는 연태영 의원 질문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기) 화성이나 구리는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는)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후 20일간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거래량은 6282건으로 대책 전 20일간

5170건 거래된 것보다 22% 이상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토하제 지정 직후인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경기도 구리시는 0.70%, 화성시 0.38%, 안양시 만안구 0.62% 등 아파트값 상승률이 수도권 평균 0.27%를 웃돌았다.

김 장관은 현재 수도권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집값도 가파른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이같은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또 “한쪽 측면에선 너무 과한 문제에 대해 어찌해야 할지 검토하는 부분도 있다”며 일부 규제지역에 포함된 지역의 지정 해제 가능성도 내비쳤다.

/권희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금길

‘새만금 첫 철도’ 건설
본격 교통 인프라 구축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 국토부 고시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국토교통부가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 확정으로 새만금 시대의 본격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이 시작된다.

이번 계획은 군산 대야역에서 새만금신항까지 총 48.3km를 잇는 여객·화물 단선전철 건설을 골자로 한다. 대야역에서 옥구까지 기존 선로 19km를 전철화하고, 옥구에서 새만금신항까지 29.3km 구간을 새로 놓는다.

옥구, 새만금국제공항, 새만금(장래), 수변도시, 신흥만 철송장 등 5개 정거장이 신설되며, 대야역은 전철화 개량 작업을 거친다.

총 1조5,859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33년까지 추진된다.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책정된 1조2,462억원보다 3,397억원 늘어난 규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 2조2,152억원, 고용유발 1만4,788명, 부가가치유발 7,582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을 관통하는 최초의 철도노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11월 개통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함께 새만금 개발의 교통축을 형성하게 된다. 향후 영호남내륙선,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서해안철도 등과 연계되면 전북을 넘어 전국적인 물류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도는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203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보면 2050년 기준 하루 1만3,203명의 여객과 컨테이너 2,449톤, 일반화물 270톤을 수송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객열차는 하루 왕복 40회, 화물열차는 왕복 6회 운행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